김경 칼럼

노동시장 체질 개선 더 늦지 말아야

본사 회장

한국이 1인당 국민소득(GNI) 3만달러 시대를 여는 데 성공했으나 고용 시장 상황은 개선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체감 경제와 밀접한 고용 시장에 여전히 먹구름만 가득하니 국민들은 경제 성장을 체감하지 못한다.

지난해 한국 경제의 '고용탄성치'(고용 증가율/실질 국내총생산 증가율)는 0.136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있었던 2009년 이후 가장 낮고, 실업율은 3.8%로 2001년(4.0%) 이후 가장 높았다.

제조업 부진에 5인 이상 중·대규모 사업체의 취업자 수도 13년 만에 처음으로 줄었다. 통계청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올 1월 기준 5인 이상 종사 사업체의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보다 2만명 감소한 1천681만3천명으로 집계됐다.

5인 이상 사업체에서 취업자 수가 줄어든 것은 2005년 12월 이후 13년 1개월 만에 처음이다.

5인 이상 사업체 고용 악화 현상은 중소사업체(300인 미만)와 대형사업체(300인 이상)에서 모두 나타나고 있다. 중소사업체의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만7천명 줄어든 1천434만4천명, 대형사업체 취업자 수는 3천명 감소한 246만9천명이었다.

이처럼 고용이 악화한 데는 제조업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무려 17만명이나 감소했다. 이는 글로벌 교역 둔화 속에 제조업 업황이 불안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 노동시장이 너무 경직된 데 따른 영향이 크다.

솔직히 한국 노동시장은 한 쪽 방향으로 치우쳐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주52시간 근로제',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친노동 정책은 쏟아졌으나 노동유연성은 없었다. 기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고용을 늘리는데 주저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쉬운 채용'만큼 상황에 따라 '쉬운 해고'도 가능해야 전체적으로 고용이 늘어나는 데 출구격인 노동유연성이 없으니 기업들은 선뜻 채용에 나서지 못하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는 결국 일자리 참사로 이어지고 소득양극화를 심화시켰다.

뒤늦게나마 정부가 기업에 대한 소통 행보에 나서는 모습이다. 연초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인들을 청와대로 불러 간담회를 갖고, 고위층의 기업 현장 방문도 잦아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도 노동시장 개혁을 꺼내들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는 사회적 대타협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변동이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인력 구조조정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대신에 직장을 잃어도 종전소득의 70%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최대 2년간 제공하고, 전직훈련 등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해주자고 제의했다.

그는 또 대기업과 공공부문 정규직 노조가 앞으로 3년 내지 5년간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동운동가 출신의 여당 원내대표가 정치적 리스크를 잘 알면서도 이런 발언을 한 것은 그만큼 노동시장 개혁이 절실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노동시장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인적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은 불필요한 인력을 줄일 수 없다 보니 신규 고용을 꺼리게 된다. 이렇게 되면 기업의 활력과 역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사회 전반에서 인재들이 적재적소로 이동하기가 쉽지 않아 불균등 발전이 초래된다.

한국의 노동시장 경직성이 국가발전의 장애물이라는 지적은 이미 여러차례 있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2018년 국가경쟁력 평가 보고서'를 보면 140개 대상국 가운데 한국의 노사관계 협력은 124위였고, 정리해고 비용은 114위, 노동력 이동성은 75위였다. 한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심각한 임금격차 문제도 경직된 노동시장과 무관하지 않다.

강력한 대기업 노조가 생산성을 뛰어넘는 수준의 임금을 요구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하청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으로 전가될 수 밖에 없다.

노동시장 개혁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이를 위해서는 해고에 따른 불안을 어느 정도 해소해야 한다. 물론 홍 원내대표가 제시한 실업급여의 대폭적인 확대는 재원 문제로 이어지기에 쉽지는 않을 것이다. 국민도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점에서 선뜻 내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사회적인 대화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어쨌든 정부가 노동시장 개선을 위해 기업에도 관심을 가졌다는 점은 다행스럽다. 단번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겠지만 기업과 근로자가 서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정부도 지원할 것은 지원해서 대타협을 도출하길 바란다. 기업은 환경만 조성되면 언제든지 투자에 나서고 필요한 인력을 채용한다.

社 說

지저분한 연예인은 퇴출시켜야

가수 겸 방송인 정준영(30)이 여성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자랑스레 단체 대화방에서 올린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그는 아이돌 그룹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와 함께 하는 단톡방에 동영상을 유포한 것으로 확인돼 경찰 조사가 불가피해졌다. 정준영의 몰카 파문은 승리의 성 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불거져 더욱 놀라게 했다. 연예인의 일탈과 탈선 행각이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성 접대 혐의로 경찰의 소환조사까지 받은 승리는 SNS를 통해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으며, 정준영은 자신이 출연중인 △1박2일 △현지에서 먹힐까 △짠내투어 프로그램에서 줄줄이 하차했다. 미국에서 방송 촬영 중이던 정준영은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12일 귀국길에 올랐다고 하지만 성난 민심은 쉽게 진정될 것 같지 않다.

정준영이 지인들과 단톡방에서 나눈 대화 내용을 보면 여성을 물건처럼 대하거나 성을 상품 취급하는 그들만의 그릇된 가치관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2015년 12월께 정준영이 성관계 동영상을 단톡방에 올리고 자랑한 사실을 알아챈 피해 여성이 '비밀을 지켜달라'고 부탁하자, 그는 부탁받은 내용까지 단톡방에 올렸다. 정준영은 단톡방에서 "동영상 찍어서 보내준 거 걸렸다. 안 걸렸으면 사귀는 척하면서 계속 (성관계를) 하는 건데"라고 떠들었다. 정준영이 "오늘 보자마자 상가에서 XX. 난 쓰레기야"라고 한 대목에서는 인기 연예인이라는 그의 사생활이 얼마나 문란한지 짐작해볼 수 있다.

문제는 그가 2016년에도 한 여성과 성관계 장면을 휴대폰으로 몰래 찍은 사실이 들통났고, 해당 여성의 고소로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는 점이다. 당시 경찰에 출석한 정준영은 핵심 증거물인 휴대폰을 잃어버렸다고 했고, 사건은 결국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이후 정준영은 몇 개월 자제했던 방송 출연을 슬그머니 재개했다.

이번 사건을 보면 그동안 대한민국 경찰이나 검찰이 연예인의 범죄 행위에 대해 얼마나 관대했는지 짐작이 간다. 만약 사법당국이 이번에도 3년 전처럼 적당히 얼버무리려 한다면 사회적 비난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이번에는 한치의 의혹도 남기지 말고 샅샅이 수사해야 할 것이다.

인기 연예인에게는 많은 팬이 따라다닌다. 팬덤은 연예인의 생활과 행동을 따라 하거나 모방하는 데서 자신들의 우상과 심리적 일체감을 느낀다. 연예인의 언행이나 생활이 그만큼 많은 이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생활이라 해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우리 사회가 연예인을 공인으로 분류하고 공인에 걸맞은 언행을 요구하는 이유다.

연예인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삶이 공인으로서 올바른 삶인지 한 번 살펴보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 방송사도 출연자를 정할 때 인기만 따지지 말고 됨됨이가 썩은 자는 가려 뽑아야 할 것이다.

독자 기고

봄철 맞아 사회적 약자시설 등 중점 안전관리 필요

여러 기관지나 언론보도, 칼럼 등을 보면 사회적 약자시설, 취약계층, 요양병원, 전통시장, 공공시설 등 다중운집장소에 대한 소방안전관리나 화재 발생 시 사회적 충격으로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가 크다는 안전관리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고 있다.

가끔 발생하고 있는 대형 화재 또한 분명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요인이 작용하고 있어 교육 때면 자주 강조하고 있는 1:29:300 이라는 하인리히 안전관리 법칙을 재 강조하고 싶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 300번의 사소한 전조가 나타나며 이후 29번의 작은 사고가 있으며 나중에는 큰 사고로 이어진다는 결국 크고, 작은 사고 이전에 같은 원인에서 비롯돼 나타난다는 내용이다.

재난에는 태풍·홍수 등 자연재해와 화재, 폭발, 교통사고와 같은 인적재난이 있다.

최근에는 미세먼지도 자연재난으로 포함하기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에서 화재와 교통사고는 그 피해가 크고 오랫동안 반복돼 왔으며 소방기관에서 육상재난대응기관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상시 관리체제가 구축 돼 있지만, 폭발·가스·추락 등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는 돌발적으로 그리고 단편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제도적 접근과 사고예측은 한계가 있어 대응에 어려운 면도 있다.

하인리히법칙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불규칙적이며 독립적으로 보여 지는 300번의 사소한 전조에서 재난유형별로 돌발요인을 최대한 분석해 사전 대비가 가장 필요한 해빙기를 지나 봄철에 자칫 소홀하기 쉬울 수 있는 부분을 대비해야겠다.

인적재난은 사람들이 방심하는 틈을 노려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집중하는 시기가 분명히 있다. 봄철 나른한 시기, 설·추석 명절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역·터미널, 여름 휴가철, 봄·가을 행사가 많은 행사철이 바로 그 때이다.

이러한 취약시기에 대한 위험요인을 사전 예측해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인명피해 경감에 소관부서들은 최선을 다해야겠다.

취약시기별 안전관리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봄철 나른한 해빙기 이후에는 주위 낙화시설, 졸음 운전사고, 음식물 올려놓고 잊어버리기 쉬운 음식물 탄화, 여름 휴가철에는 물놀이사고, 명절에는 교통사고, 행사철에는 붕괴, 자그마한 불씨에서 이어지는 대형화재이다.

우리 전남소방은 지난 겨울부터 요양원 등과 같은 사회적약자시설과 전통시장 등에 대한 중점적으로 안전관리를 최고의 목표로 해 우선 정책을 추진 취약시설 제거, 피난시설 보강, 전통시장 호스릴 소화전 설치 등 시·군청과 소방서간 협업으로 안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안전정책은 공공기관의 노력만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각종 재난에 대한 제도적인 정책개발도 중요하지만 우리 도민 모두가 나와 이웃에 대한 안전의식을 생활화함으로써 보다 행복하고 즐거운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김종태 보성소방서 예방안전과장

전남도민일보 www.jndomin.kr 6124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75 소석빌딩 5층

회 장	김 경	대표전화	(062)227-0000	FAX	(062)227-0084
발행인	전광선	광고	(062)227-0083	구독료	월 10,000원
사장·편집인	이문수	등록번호	광주, 가25(일간)	인쇄처	(주)남도프린테크
편집국장	제갈대종	서울사무소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91-7 에이스테크노8차 1403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남도민일보가 지역민과 함께 유익하고 알찬 지면을 만들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오피니언' 면은 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마당입니다. 이웃들의 미담이나 생활 불편사항, 개선점, 기고 등을 보내주시면 제작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이메일 2580@jndomin.kr 전화 (062) 227-0000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읽는 바른신문

전남도민일보 지역기자안내

지역	직급	성명	연락처	지역	직급	성명	연락처
광산	국장대우	주형탁	010-3642-2444	강진	차장	전문재	010-6221-3346
동구	국장대우	서기환	010-4602-0708	해남	본부장	윤규진	010-2001-8078
남구	기자	이유빈	010-9632-5879	장성	부장	정윤섭	010-3640-6323
북구	부장	김정관	010-9464-2555	무안	차장	김수형	010-3648-0281
목포	국장대우	박성태	010-3602-5869	영광	차장	김 진	010-9221-0000
신안	국장대우	박성태	010-3602-5869	여수	본부장	오승택	010-2080-6002
나주	국장대우	김동철	010-3604-2611	순천	본부장	오승택	010-2080-6002
담양	국장대우	강홍면	010-6297-7589	광양	본부장	오승택	010-2080-6002
곡성	부국장대우	심성섭	010-3608-2634	고흥	본부장	윤규진	010-2001-8078
구례	국장대우	심근식	010-4624-0005	함평	차장	박창오	010-5189-5639
보성	국장대우	김용욱	010-3602-8103	영암	국장대우	김희선	010-3631-1617
화순	차장	남호경	010-3624-6785	완도	국장대우	유대성	010-5007-5963
장흥	국장대우	김정근	010-3601-3517	진도	차장	김한태	010-3632-4000